

보도시점 2024. 8. 30.(금)
 회의 종료 후(별도공지)

배포 2024. 8. 30.(금)
 09:00

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,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

- ▶ 6.19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은 대부분 既조치 또는 조치 이행 중
 - * 8월말 기준 151개 과제 중 85개 既조치, 나머지 과제도 시행방안 마련 등 조치 이행 중
- ▶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'25년 예산안에 차질없이 반영
- ▶ 직장어린이집, 신혼·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주요 과제 구체화 및 지원 신설·추가 확대

* ①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의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유도, ②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신설, ③종교시설 활용 틈새돌봄 확충, ④신혼·출산가구 매입임대 2만호 추가 확대(총 6만호), ⑤다자녀가구 K-패스 할인혜택(최대 50%) 신설, ⑥육아휴직시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 신설 등

- ▶ 민간주도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」 출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대응 확산
- ▶ 9월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「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」 구성·운영

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0일(금)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「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(6.19)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9월중 추진할 과제(53개)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□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,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(83개)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既조치했으며,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다.

□ 특히, 8월에는 ①일·가정 양립, ②양육부담 완화, ③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.

① 6.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·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(월150→최대250만원), 단기 육아휴직 도입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(5→20일)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.

-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,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(월 최대80 → 120만원)하였으며,
-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(월 10~40 → 20~60만원)하였다.

②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(기준 중위소득 150→200%)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,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(+5~10%p)하였다.

③ 주거 및 임신·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(1.3→2.5억원, 3년 한시)하고,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(1회→최대3회), 난임·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(10→12개소) 등 임신·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하였다.

□ 또한,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,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하였다.

① 먼저,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유도,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,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.

-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.

- 우선 정부청사(서울, 세종, 과천, 대전청사)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, 지자체·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.

- 아울러,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」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·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
- **상생형 직장어린이집**(65개소)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, 병원동행, 하원지도 등 **긴급한 돌봄수요**가 발생할 경우,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**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**한다.
- 아울러, **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**을 위해 「저고위-17개 시·도-근로복지공단」 간 **업무협약**도 체결할 예정이다.
(9.11, 제2차 저고위-지자체 협의체)
-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**종교시설을 틈새돌봄**(휴일·야간) 시설로 신속히 **활용**할 수 있도록 **관련 절차를 간소화***하기로 하였다.
- * 종교시설과 돌봄시설(복지시설)의 복수용도 사용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면제

② **신혼·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**한다.

- 향후 2년간('24~'25년) 공급하는 **신혼·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**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(4만호)보다 **2만호를 추가 확대**하여 **총 6만호***를 공급한다.
- * (당초계획) 1.8만호 → (저출생 대책, 6.19) 4만호 → (주택공급대책, 8.8) 6만호
- 또한, 민간·공공분양의 경우, **지자체가 특별공급**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*에 대해 '**저출생·고령사회 대응**'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**추가**하고,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**면적제한도 완화**(85㎡ 이하→초과 가능)한다.
- * 공급물량의 10% 범위내, 승인권자가 인정시 최대 15%

③ **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**되었다.

- 먼저,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**최대 50%의 K-패스 할인혜택***을 **신설**한다.
- * K-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: (현행) 기본20% → (개선) 2자녀 30% / 3자녀 이상 50%
-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**확대**(소득기준 8→9구간)하여 **약 50만명**(다자녀 가구는 10만명)을 **추가 지원**하고, 특히 **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**에 대해서는 **더욱 두텁게 지원***한다.
- * 신규(9구간) 지원금액: (일반) 100만원 (다자녀가구) 첫째-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

-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→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,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%의 감면을*을 적용할 예정이다.

*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100% 감면

-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*하고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(월 20만원)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한다.

*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(기존) 통상임금 100% 상한 200만원 → (개선) 통상임금 100% 상한 220만원

- 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*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% 비중으로 신설한다.

* '24년 예산 기준 부동산교부세 배분재원은 총 4.1조원

< 현행 >		< 개선(안) >	
배분기준	비중	배분기준	비중
재정여건	50%	재정여건	50%
사회복지	35%	사회복지	20%
지역교육	10%	저출생 대응(대체 신설)	25%
보유세 규모	5%	보유세 규모	5%

□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.

- ① 일·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,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(9월 입법예고)이고,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*도 개최(8.6)하였다.

* 기업분야 11건, 근로자분야 11건 등 총 22건 시상

- ②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·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*하였으며,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'(가칭)영·유아학교 시범 사업**'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假지정(8.21)하였다.

* 늘봄학교 도입 일정: ('24.2학기) 1학년 → ('25) 1·2학년 → ('26) 초학년

** 기본운영시간(8h) 외 아침·저녁 돌봄시간(4h) 추가 확대,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 개선 등

- 또한,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*하고, 「어린이 Fast Track」 도입을 위해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(7.22~8.31) 하였다.

* (7월) 국립중앙박물관 → (8월) 국립현대미술관, 국립국악원, 국립중앙극장 추가

- ③ 주거 및 결혼·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既 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, 제왕절개비용 무료화(본인부담 5→0%) 내용을 담은 「건강보험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(8.2~9.11) 하였다.

- ④ 한편,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(소위 '스드메')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,

-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'소비자 피해주의보'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지난 한달 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되었다.

- ① 먼저, 경제계·금융권·방송계·학계·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」가 출범(8.23)하였다.

-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,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·출산·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.

- 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적극 환영하며,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.

- 정부도 민간의 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」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.

② 신한금융은 중소기업의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」에 100억원을 출연(8.21)하였다.

- 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(6.19)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로,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.
-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* 외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.

* 대체인력지원금: (현행) 月 최대 80만원 → (개선) 최대 120만원(25년도 예산안에 포함)

③ 한편, 개별 기업·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·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.

- 기업들은 출산휴가·육아휴직 제도 개선,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일·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,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·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적극 출시하고 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.

① 먼저,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.

- 일·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「남녀고용평등법」 개정안을 발의하고,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(가칭)영·유아학교,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.

-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**신혼·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**(연간 12만호+α), **청약요건 완화** 등을 위한 **하위법령 개정*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 9월 중 주거 분야 조치 하위법령 >

법령	주요 과제	9월중 조치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	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+α 공급	개정안 마련
	신혼특공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	
	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	
	신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	
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	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+α 공급	개정안 마련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	개정안 마련
	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	
	신혼 특공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	
	신혼 특공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	

- ② 또한,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**전국 단위 「국민모니터링단*」**을 **9월 중 출범**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**국민적 관심도를 제고**하고,

* 미혼청년, 무자녀·유자녀 부부, 맞벌이 등이 포함된 만 24~44세 성인 남녀 200명으로 구성

- 핵심 이해당사자인 **청년세대**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(가칭)「**미래세대자문단**」(전국단위 약 100명)도 **별도 구성·운영**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**제2차 저고위-지자체 협의체(9.11)***, **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****를 통해 **중앙-지방간 협력,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**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.

*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지자체 정책건의,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

** (既개최) 인천(5.23), 충남(5.29), 경북(7.4), 강원(7.24) / (예정) 충북(9.4), 전북·광주(10월중)

- ③ **가족·생명·공동체 가치**에 대한 **사회인식 변화**를 이끌어내기 위해 **문화적 대응 노력**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- **결혼·출산·육아**에 대한 **긍정적 인식**이 확산되도록 ‘**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**’ 등을 담은 **방송콘텐츠 제작·홍보***를 확대하고, **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**할 예정이다.

* **가톨릭평화방송**(가정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저출생 극복/12월), **원불교 원음방송**(2030 결혼, 출산, 육아 등에 대한 인식 캠페인 등/11월) 등 **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·방영**

-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**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***을 전개하고,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.

* '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밤길걷기' 캠페인(개신교-한국생명의전화 연계) 등

- 아울러, 인문과 문화에 담긴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**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, 소통을 증진**시키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* 취약계층 및 디지털과몰입청소년, 청년층의 인문 치유, 세대 간 소통 및 이해 증진 사업 운영

- ④**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**효과성 (Outcome) 위주로 평가**할 수 있도록 **평가체계 개편 등 성과관리 방안도 보다 구체화**해 나갈 것이다.

< (참고)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계획(안) >

- ▶ (성과지표) '30.初 합계출산율 1.0 달성을 목표로 3대 분야* 핵심 과제별' 효과성-효율성-지속가능성'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표 설정
* 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, 돌봄·교육,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·출산 친화환경 조성
- ▶ (추진체계) 부처 內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·운영 → 종합점검·평가
- ▶ (추진일정) 부처별 성과관리 계획 수립·확정(10월) →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(12월) → 종합 성과평가 점검 및 환류('25.1~3월)

- ⑤** 또한, 관계부처 합동 「**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**」을 **9월말부터 구성·운영**할 계획이다.

- 「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」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「인구전략기획부*」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·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.

* 「인구전략기획부」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「정부조직법」·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」 개정안 발의(7.11)

< 「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」 개요 >

- ▶ (구성)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(단장), 복지부(부단장) 등
- ▶ (기능) ①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·평가제도 등 세부안 마련, ②예산 및 청사 확보, ③인구부 조직 구성 및 관련 법령 제·개정 지원 등

- 주형환 부위원장은 “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으나, 2분기 출생아 수는 ‘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”고 말하며,
 - “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아울러, “좋은 일자리 창출, 사교육비 부담 완화,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,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”고 말했다.
 - 또한, “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」 제1호 출연, 「저출생 극복 추진 본부」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”이라고 말하며,
 - “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,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”이라고 밝히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구조개선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박성균클 (02-2100-1211)
			사 무 관	송정아 (02-2100-1212)
			과 장	이중진 (02-2100-1246)
			서 기 관	박지원 (02-2100-1248)
	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나윤정 (044-215-5910)
			사 무 관	박성훈 (044-215-5912)
	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장은섭 (044-202-3370)
			서 기 관	김웅년 (044-202-3690)
	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책임자 담당자	과 장	나현주 (044-203-7261)
			사 무 관	윤혜수 (044-203-7254)
	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조정숙 (044-202-7470)
			사 무 관	장지훈 (044-202-7412)
	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하창훈 (044-201-3634)
			사 무 관	장문석 (044-201-3635)
	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박정애 (02-2100-6321)
			사 무 관	이희원 (02-2100-6329)
	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유경호 (044-200-1981)
			사 무 관	정동호 (044-200-1984)
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이정은 (044-203-2511)
			사 무 관	문영기 (044-203-2522)
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이재형 (02-2110-4070)	
		서 기 관	이향숙 (02-2110-4493)	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	이승규 (044-200-4405)	
		서 기 관	송 선 (044-200-4406)	